

“고액체납자, 강력 대응해야”

두세훈 도의원, 조세채권존재확인 통해 소멸시효 중단 방안 제시

전북도의회에서 최근 4년 동안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총 20억 이상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향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안주2)의원이 14일 제308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중 향후 소멸시효 완성이 1년도 남지 않은 고액체납액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존재확

인소송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가 과거에는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가 무자력인 경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6년 10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채권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수원지법 2015구합65019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 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제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세훈 의원은 자산공시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제기를 한다고 하면서 세정결과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지방세 고액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는데 있어 법무행정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효중단 조치관련 법률조언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두세훈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유연하게 운영할 것과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관리 담당제를 지정 운영해 고액체납액을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기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문화상 국회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수현 유엔해비타트 한국 위원회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13일,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민간인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결손처분 관련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고액체납자나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기능

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도청지하체육관 마무비타를 보면 족구,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가지각색의 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체육종목별로 선을 표시해주는 디지털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도청 직원들의 여가문화 확산 및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세정과에 지방세 징수 등 세정업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세정업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무직 직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수 직렬 사기진작 및 배려차원에서라도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성과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 2019년 총 141개의 각종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0개로 작년 29개보다 더욱 증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위원회 관련 조례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11명이 4~5개씩 총 47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與 “나경원, 200여일 만에 檢출석... 국회 폭력 뿌리 뽑을 기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나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고발된 지 무려 200여일 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타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받는 동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며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상대 당 인사들에 유독 가혹하게 들이쳤던 ‘공정’, ‘정의’, ‘민주주의’, ‘헌법수호’, ‘법치’ 등의 가치들이 본인에게

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리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했다.

/뉴시스

도의회 환복위, 새만금추진지원단 조직 · 인력운용 문제 지적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3일,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새만금추진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송지용 의원(완주)은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조직 구성 이유는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역설하며, 특히 투자유치 및 SOC 관련 사업을 전라북도가 단독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성과를 만들 수 없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 직접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새만금추진지원단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적어 인력운용이 비효율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조직 점검을 통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와 협치를 강조하며,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논리 개발을 통한 신속하고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등을 단순히 통계 숫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도민 모두가 새만금개발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농경지 축산분뇨 살포시 농업기술원 시비처방서 발급받아 살포하고 있지만, 실제 투입량이 훨씬 많아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성경찬 부위원장(고창1)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관광단지 내 게이트웨이(Gateway) 개발이 10년 가까이 미적거리고 있고 수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에도 마땅한 민간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수백억원대의 부지 매입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2023 세계 팸버리대회를 앞두고 게이트웨이에 편의시설에 맞춰 기업유치를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국방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만족도 조사 91점

패딩형 동계점퍼가 이달 말까지 전방 및 격오지 부대 병사에게 보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3일 “경기, 강원 등 전방 지역의 추운 기상 환경 하에서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병사 12만4000명을 대상으로 패딩형 동계점퍼를 지난 10월부터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딩형 동계점퍼는 올해 처음으로 군에 보급하는 피복으로 기존 작전 임무에 특화된 군 방한피복과는 달리 병사들이 다양한 병영생활에서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는 피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영생활 간 체육활동 및 여가시간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 활동과 겨울철 열악한 기

상 상황에 알맞은 피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패딩형 동계점퍼는 병사들의 취향을 고려하고 민간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을 기초로 보온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 생활방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 받은 부대 병사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만족도가 약 91점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병사들이 동계점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육군 15보병사단 정동영 병장은 “동

계점퍼는 병사에게 꼭 필요한 보급품이라 생각한다”며 “겨울철 작전활동 간에 기능성 방한복 또는 방한복 상의(내·외피)를 착용하나 그 외 시간은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 불편했는데 동계점퍼를 입으니 너무 편하고 따뜻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으로 겨울철에 병사들이 작전활동 외 일상 생활에서 따뜻한 피복을 착용함에 따라 군 복무 만족도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인 11월 말까지 패딩형 동계점퍼를 전방 및 격오지 부대 병사에게 보급하고 국회 예산 확정 시 내년부터는 일대하는 병사 전원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